

헌법특위, 5대 원칙 반영 '개헌안 초안' 공개

수도조항 신설, 행정수도 재추진 길 열려... 의원 소환제도

문대통령, 늦어도 21일까지 발의 단일안 마련 못한 쟁점 복수안 보고 정부형태 '대통령 4년연임제' 채택

관심이 모아졌던 정부 개헌안 초안이 13일 공개됐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 개헌 등 '5대 원칙'을 반영한 개헌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인 '6·13 지방선거 개헌'을 지키기 위해 늦어도 이번달 21일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헌안 초안에는 헌법전문 조항에 5·18 민주화운동 포함, 수도조항 명문화, 지방 자치·분권 강화 등 내용이 담겼으며, 특히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권한 축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정부 개헌안이 현실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쟁점은 1·2·3안 복수의 안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개헌안 초안에는 현행 헌법전문에 명시된 3·1운동, 4·19 민주이념에 더해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시민혁명 정신을 담을 필요가 있으며, 이들 민주화운동들은 발생한 지 30년 이상 지난 만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 헌법전문에 포함시켰다는 게 자문특위의 설명이다. 다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정해구 위원장과 함께 입장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에 발의될 정부 개헌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개헌안이 국민 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우선돼야 하는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문특위는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이번 개헌안 초안에 담았다.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 확대, 법률안·예산안 심사권 실질화, 대통령 헌법기관 구성 권한 축소, 대법관 제정권·헌법재판관 지명권 등 대법원장 인사권 축소 등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도 자문특위는

자문특위는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이번 개헌안 초안에 담았다.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 확대, 법률안·예산안 심사권 실질화, 대통령 헌법기관 구성 권한 축소, 대법관 제정권·헌법재판관 지명권 등 대법원장 인사권 축소 등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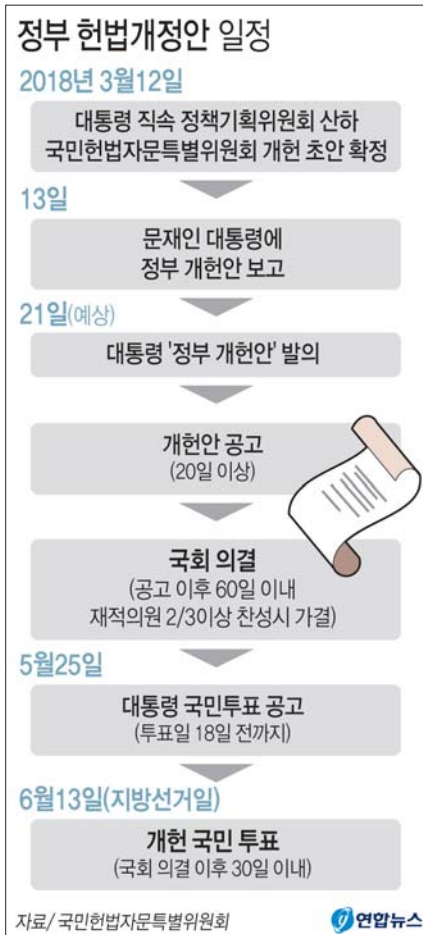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도 자문특위는

결선투표제 규정을 포함시켰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과반수 등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공약했던 것으로, 충분한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인위적 후보단일화를 방지해 선



거권자의 후보 선택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는 것이 자문특위의 설명이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자치분권의 이념도 개정안 초안에 반영됐다.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됐으며,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대의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지방정부 조직·운영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시켜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했다.

입법부인 국회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선거의 비례성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발안제 등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이 부적절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등의 근거를 헌법에 마련해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고 사법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편, 개정안 초안에는 수도 조항을 신설해 관습헌법에 따라 발목 잡혀 있던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육성, 양질의 생산품·서비스 받을 소비자 권리 보장 등의 내용과 사회적 위험 대비 사회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일·생활 균형 실천을 위한 국가 노력 의무 등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metroseoul.co.kr

與 “국회 논의 서둘러야” 野 “靑이 나설일 아냐” 中·日, 북 비핵화 등 韓 평화정착 지지

야당, 개헌발의에 강력 반발

'국회 의결 불가' 전망 우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으며 개헌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국회 개헌안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지만,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재적 국회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개헌안 국회 의결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초안은 국회 개헌 논의 의제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정부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국회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핑계로 개헌 논의의 진척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 정부가 불가피하게 나서게 된 이유는 한국당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회 주도 개헌 성사 여부가 달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린 한 주민만큼 야당과 협상에 남다른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개헌안을 야당을 향한 압박 카드로 사용하며,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국회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정부 개헌안은 철회가 가능하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에는 귀를 열면서 국회의 논의에는 귀를 닫고 있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집착은 좌파 독주, 사회주의 개헌을 위한 일방통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국가의 백 년 미래를 내다보고 기틀을 세우는 것으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이 되어야지 문재인 독주, 졸속 개헌, 사회주의 급속열차를 타는 개헌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야당들도 정부 개헌안 발의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 주도의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은 진행되기 어렵다”면서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中·日, 북 비핵화 등 韓 평화정착 지지

정의용-中·서훈-日 파견 효과

아베 “한미일 협력문제 해결 전력” 시진핑 “중한관계 발전하길 바라”

한반도를 사이에 둔 일본과 중국의 두 지도자가 북한의 ‘비핵화의지’에 대해 강한 공감을 표했다. 한국과 북한의 대화, 북한과 미국의 대화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패싱’을 우려하고 있는 이들 두 나라에 대해 특사로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전격 파견해 다독인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서훈 국정원장을 13일 총리 관저에서 만나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일본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해 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일이 협력해 서북한 핵·미사일과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원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

당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의 의지를 밝힌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물결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려면 한일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정의용 실장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푸젠팅에서 만난 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은 남북 양측의 상호 관계 개선과 화해 및 협력 추진 그리고 북미 대화, 협상을 통해 우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현재 한반도 정세는 중요한 대화 기회에 직면해 있고 중국은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한국이 포함된 국제사회는 중국이 제기한 쌍궤병행(雙軌並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에 각국의 유익한 제의를 결합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정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중국에 특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마찬가지로 중한 관계 발전을 중요시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성공적인 회담을 했고 연초 전화통화로 양자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좋은 소통을 유지했다”고 언급했다.

/김승호 기자 bada@